

세계 양돈 산업의 현황 및 수출 전략(Ⅱ)



경남첨단양돈연구소

도 창 희 소장

3. 수출 주도형 양돈 산업 전환

1) 돼지 질병과 돼지고기 교역

가. 질병관련 무역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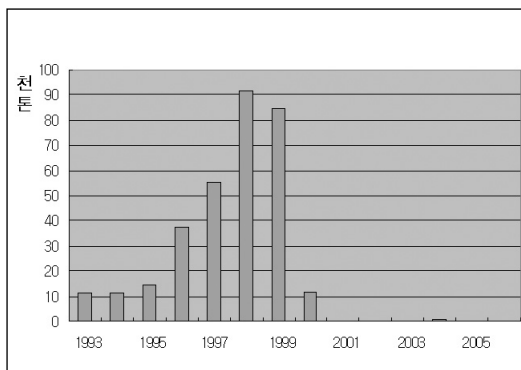
(Disease-related closures)

국제간 가축의 질병으로 인한 무역의 장벽이 높아져 가고 있다. 영국과 유럽의 광우병 발생이나, 대만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국제 육류거래시장이 혼란의 상태에 빠졌었다. 주요 질병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양계), 광우병(BSE)(소), 구제역(FMD)(소, 돼지)이나 일본은 돼지콜레라도 수입의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1997년 대만의 구제역 발병 후 일본시장에서 대만의 돈육수출이 중단되고 97년 1월 이래 돈육 생산이 32.6% 감소되었다. 우리나라도 구제역 발병 후 일본으로의 돈육 수출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2000년 10월 일본은 돼지 콜레라 백신중단을 선언하고 청정화 정책을 채택하였다. 현재 일본은 돼지콜레라의 예방접종을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청정화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따라서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으로부터 생고기의 수입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화를 하고서도 일본에 수출을 재개하지

〈그림 1〉 연도별 우리나라 돼지고기 일본 수출 물량(농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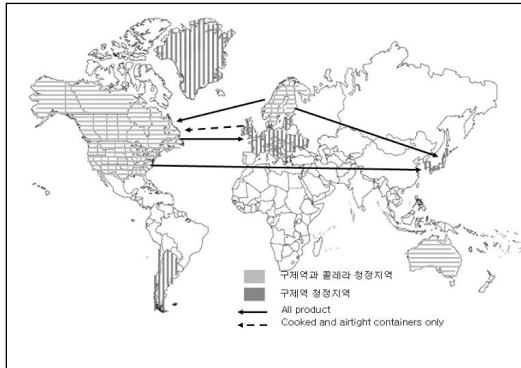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도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청정화 상태를 지키면서 돈육의 수출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달성하지 못하여 미국에 멸균 가공된 돼지고기를, 공기를 차단한 용기로 포장된 것만 제한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일본 돈육의 수입은 덴마크, 미국, 캐나다 등 구제역과 돼지콜레라가 청정화 된 나라들로부터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이로서 국제간 돈육거래는 질병의 방역상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칠레도 돼지콜레라 청정국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가 돼지콜레라를 청정화한다면 질병의 차단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그림 2〉 세계 돼지고기 무역의 흐름



2)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FTA)

다자간 무역 협정(WTO 체제)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세계 각국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하여 상대국에만 제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자국산업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가. 한·칠레 FTA 추진 경과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결정 ('98.11)
 - 1998.11.5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 공식협상 추진('99.12~2002.10, 6차례)
- 협상타결(2002.10.24)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안 수용, 최종 타결
- 서명(2003.2.15)
 - 서울서 김대중대통령과 칠레 라고스 대통령이 협정문에 공식 서명

나. 한·미 FTA 협상

- 한·미 자유무역협상개시 (2006. 2)
- 한·미 자유무역협상타결 (2007. 4. 2)
 - 여덟 차례 협상, 두 차례 고위급 협의, 3.26~4.2 장관급 협상에서 최종 타결(1년2개월 소요)
 - 농림 수산부분은 총 17개분과, 2개 작업반 중 농업, 상품, 위생·검역(SPS), 원산지·투자·서비스 분과에 관련
- 농수산물 양허 협상은 예외적 취급범위 최대한 확보
 - 미국 → 한국 농수산물 수입품목에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

- 한국 → 미국 농수산물 수출품목에는 대한 미국 관세는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철폐

- 수입쿼터(TRQ)관리, 셰이프가드에 관한 규범을 마련

※ 협정문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음

○ 농수산물 양허 품목수

○ 축산물 관련 양허안 협상결과

- ASG 발동 세율 : 실행세율 적용(5년차), 실행세율(70 → 50%)(매년 5%씩 감축)

○ 냉장육(도체, 전후지) 22.5%, 냉동육 25%, 식용설육 18~30%, 돼지가공품 27~30%

: 2014.1.1 철폐

○ 소시지 18% : 5년후 철폐

(단위 : HS code 품목수)

구분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무역품목수	1,948	1,087	444	407
양허품목수	1,915	1,064	444	407
양허제외 품목수	23	23		

- 원산지 : 육류는 제3국에서 수입한 생축을 도축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하여 관세율 적용, 그러나 위생검역 및 원산지 표시는 별개

- 서비스 부분 개방 유보 : 육우 사육업에 대한 투자 금지 또는 제한, 수의서비스, 유통서비스(도매업, 가축시장, 공판장, 수입쿼터)

- 학교 급식의 국내 농수산물 우선 공급(정부 조달 시장 개방 유보)

○ 민감한 2개 세 번(22.5%) : 10년후 철폐, 동기간 ASG 적용

- 냉장 삼겹살과 기타(갈비, 목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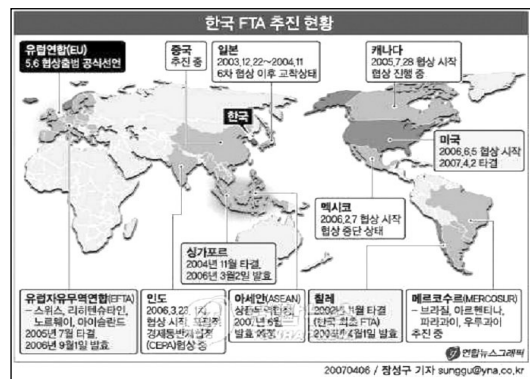
- ASG 발동 물량 : 8,250톤(1년차) → 13,938톤(10년차, 6% 증량)

다. 한-EU FTA

○ 한·EU 자유무역협상개시(2007. 5. 7)

○ 한·EU 자유무역 금년 말 타결목표

〈그림 3〉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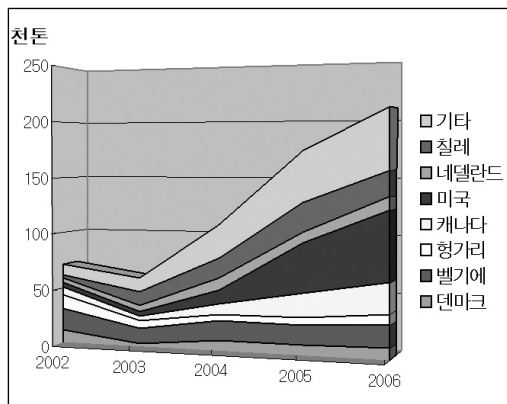


라. FTA의 영향

2003년 3월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돈육시장의 교란을 우려하였는데 칠레로부터 돈육의 수입량이 FTA이전 보다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WTO체제 하에서 돼지고기의 시장개방은 지난 94년도에 냉장육이, 냉동육은 지난 97년 이후 완전 개방

되어 칠레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2003년 미국의 광우병 발병으로 쇠고기 가격폭등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광우병 발병이전 6만 톤의 수입이 2007년에는 21만 톤에 달하고 있다.

〈그림 4〉 국내 돼지고기의 수입(농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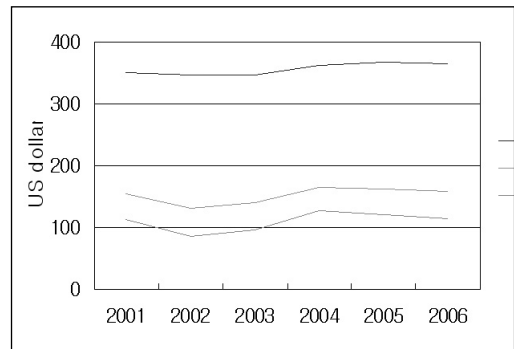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미국의 돼지의 산지 출하가격 평균은 2002년에 85불이며 최근 가장 높은 2004년에도 128불에 지나지 않고, 달러-원 환율의 약세로 우리나라의 돈육시장을 가장 크게 잠식할 것으로 예측된다. FTA체결 비준 이전의 우리나라 수입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FTA 비준 후 일정기간 경과하면 무관세로 우리나라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낙관적인 사항은 국내 돼지고기 수입은 이미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어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액이 높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냉동 삼

겹살의 경우, 미국산보다 가격이 높은 칠레나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전망이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냉동 삼겹살 국내 수입량 중에 차지하는 국가별 평균 비중은 EU(42.2%), 캐나다(23.8%), 칠레(10.3%)이었고 미국은 16.2%에 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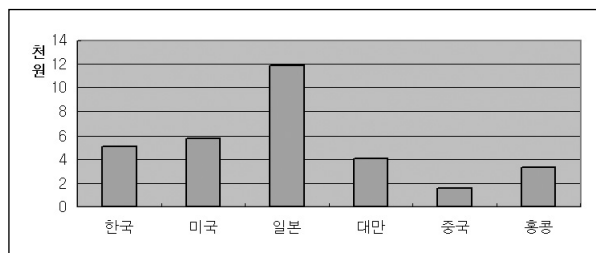
〈그림 5〉 미국국내 돼지고기의 유통단계별 가격(FAPRI)



3) 기타 요인들

한국은 WTO체제 하에서 돼지고기의 시장 개방은 지난 94년도에 냉장육이, 냉동육은 지난 97년 이후 완전 개방되었다. 이미 개방된 시장은 어떠한 합법적인 근거 없이 다시 관세율을 올리거나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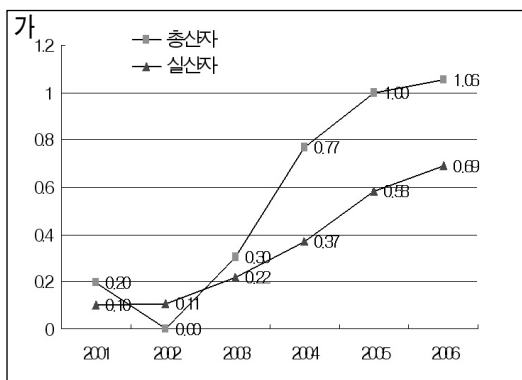
〈그림 6〉 주요 국가별 돼지고기 소매가격(FAP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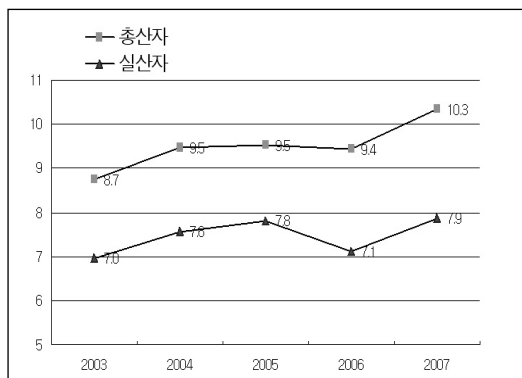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된다면 국제무역에서 외톨이가 될 각오를 하여야 한다.

미국과 무역협정은 최종 비준이 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의 선택은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산지 돼지가격은 우리보다 훨씬 낮지만 소매가격이 우리나라 보다 700원 정도 높은 5,710원 정도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부위별 편중 소비행태로 인해 안심·등심 등 부위별 수출에 따른 경쟁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심과 등심의 국내가격이 낮으므로 부위별 수출의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최대수입국인 일본과의 지리적 이점을 통해 고품질 냉장육 수출이 가능하다. 일본 수출의 재개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내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한 이행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청정화를 달성하면 국내 돼지고기의 생산량 109만톤 보다 더 많은 120만톤을 수입하는 일본 시장이 열린다.

〈그림 7〉 경남 흑돈 모돈의 생년별 산자수의 평균 육종가



〈그림 8〉 경남 흑돈의 연도별 총산자수와 실산자수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두 개의 그림은 경남첨단양돈연구소에서 계통조성 중에 이룩한 성과이다. 불과 4년 만에 총산자수 1.6두의 개량을 달성하였다. 이렇게 개량된 돼지가 전 농가에 보급된다면 경제적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수출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선택이 신중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국제적인 규범에 맞게 농가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 WTO의 농업 보조금 정책에서 규정상 감축 대상은 가격차 보전방식, 소득 보전방식이고, 규정상 허용대상은 조기은퇴조건 직불제(구조조정형), 경관보전 또는 조건불리직불제(도로변 꽃길 또는 도서지역), 친환경 농업 직불제등이다. 친환경 직불제를 활용하여 정부에서 분뇨처리비용 부담을 한다면, 농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동시에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정책 구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의회를 심분 활용하는 시스템이

다. 의회에서 대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행정부에 압력을 가한다. 미국의 아이오와 주립대와 미주리 주립대에 설치된 Food and Agricul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가 그러한 예이다. 또한 상하원에서 축산 또는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기도 한다. 그러한 정책 구현의 메카니즘은 대규모 농민시위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없앤다. 단지 동물복지 또는 환경단체가 같은 시민단체들의 시위는 발생할 수 있다.

덴마크의 경우는 생산자 조합이 정부의 정책을 집행한다. 꼭 필요한 검역이라든지 국가의 공적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정 제정, 정책을 집행한다. 덴마크의 양돈조합인 Danish Pig Production이 그러한 기관인데 생산자 단체와 육가공협회가 연합하여 만든 기관이다.

이 기관의 연간 예산 약 148억원이 책정되어 대부분의 생산성 향상 정책, 그리고 품질 인증, 종돈개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농민단체가 정책을 입안

집행하니 정책 결정의 기간이 짧고 집행 효율성이 높다. 또한 양돈 산업에 꼭 필요한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농림부에서 정책을 양돈 산업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입안하고 이를 광역단체 시달한 후 기초단체 시행하는 것을 광역단체가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은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수동적인 자세에서도 유발된다.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농가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나와도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

〈그림 9〉 덴마크의 양돈 산업관련기관

